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김명식 / 한국산업은행 북한·중국팀장

문제 제기

오는 6월 12~14일에는 남북한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상회담 예정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정부 주도에 의한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농업 구조 개편을 위한 세부 계획이 구상중에 있으며, 민간 기업에 의한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지나친 나머지, 국내 민간 기업들은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너도나도 대북 진출 계획 사업을 발표하는 등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중한 마음가짐과 철저한 준비 자세이다. 특히 북한 지역은 막대한 계획 사업을 유치할 만한 유인인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투자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는 등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국제적인 신뢰도마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자금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투자한 자금이 제

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이제 막 외환 위기를 벗어나려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참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북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의 방안과 그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봄으로써, 향후 전개될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소요 자금 규모가 먼저 추정된 상태에서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 개발을 위한 계획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요 자금 규모를 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용도나 자금 여력 등으로 미루어 단계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금 조달과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나 기술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은 제외하였다.

자금 조달의 기본 전략

남북 경협의 활성화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정부의 주도에 의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에 의해 북한 진출이 선점될 경우 남북한 산업 보완 효과를 기대만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루어질 통일 한국의 경제·산업이 외국에 크게 의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전부 부담하기 보다는 남북 경협 진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북한에도 일정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시 북한내 지하 자원이나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셋째, 자금 조달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하되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과 개발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을 중점 추진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 국제 금융 기구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금 조달의 기본 전략은 첫째, 우리 정부의 주도에 의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것 둘째,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전부 부담하기 보다는 북한에도 일정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 셋째, 단계적 자금 조달 방안 마련 넷째, 다양한 조달 방안을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조달 비용을 최소화 다섯째, 공적 자금의 투입은 가급적 촉매 역할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인 자금 투입은 주로 민간 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이다.

북한의 국제 금융 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이 가입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 주도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되, 북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거나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정식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북한의 직접 자금 조달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외 자금 조달 방안은 북한의 대외 개방과 추진 의사, 국내외 금융 시장의 동향에 따라 다양한 조달 방안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적 자금의 투입은 가급적 촉매 역할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인 자금 투입은 주로 민간 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자금조달 방안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대북 경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국내의 일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국내외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된다.¹⁾ 때문에 우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본 고에서는 국내에서 우선적인 몇가지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일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이는 일반 기업들이 국내에서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를 북한에 투입하는 방안으로서 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채권 보전과 관리 등의 문제로 대규모의 자금이 조달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의 대북 일반 자금 투자는 결국 해당 기업의 사내 유보금 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국내외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금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들 수 있다. 동기금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자금이므로 남북 경협 지원용으로 기존에 할당된 50억 원에 달하는 경협 지원 자금보다 더 증액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말 현재 조성 금액은 8,291억 원에 달하나

경협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가용 규모는 현재 약 1,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대의경제협력기금을 들 수 있다. 동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 지원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는데, 금년도에 9,429억 원의 기금이 조달 및 지출될 계획으로 되어있다. 다만 동기금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남북 경협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부문의 금년도 조성액 2조 8,067억 원 가운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7,000억 원을 들 수 있다. 동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로서, 남북 경협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에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만 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 6,500억 원이 다 소진한 사례로 미루어 남북 경협에 전용될 금액은 극히 미미할 수준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겠지만 그 규모 또한 그다지 크

1) 최근 LG경제연구원에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비롯하여 에너지,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매년 2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약 10년간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김석진(2000. 4.19),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567호). 본인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인프라를 제외한 산업 설비를 남한 산업 설비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은 약 150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 않을 것이다.

셋째, 별도의 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막대

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의 기금 구성에 한계가 있어 원활한 경협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칭 남북경협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초기에는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협회비 성격 또는 남북한 경협에 따라 부과되지 않은 관세의 일부를 적립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되 점진적으로는 정부 출연금에 의한 방식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증기금과 같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기관간 일정 비율만큼의 기금을 마련, 자금을 적립하여 이를 재원으로 경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복권 발행을 통한 기금 조성을 들 수 있다. 다만 복권 발행은 자금 조성률이 20% 내외이기 때문에 이를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타 방안으로서 증세, 국공채 발행과 국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공적 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또한, 별도의 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증세, 국공채 발행과 국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공적 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들 수 있다.

나라의 담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²⁾ 어느 정도의 증세에 의한 자금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을 위한 세 부담 증가와 겹쳐 국민의 불만이 증대할 것이며, 기업의 자금 경색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국공채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은 국공채 잔액 누적에 따른 재정 적자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며 준조세적 효과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유가증권 등 국가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한 공적 자금 마련 방안은 대규모의 국가 보유 자산 매각에 따른 민간 시장의 자금 경색 및 투자 위축과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보유 자산 가운데, 토지를 매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고, 유가증권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금융 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추진 과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199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와 사회 보장 부담률은 23.2%인 반면에 미국 27.9%, 일본 28.4%, 영국 36.0%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1999), 「국제통계연감」).

국내 자금만으로는 경험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볼 수 있는 해외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북한의 對일본 청구권 자금 활용, IMF, IBRD, ADB 등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의 공공 차관 도입 방안을 들 수 있다.

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6 개월이 될 것이며 차관 공여 기간은 10 년 이상 장기가 대부분이다. 다만 공공 차관은 어떤 용도나 목적에 부합

해외 자금 조달 방안

국내 자금만으로는 경험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북한의 對 일본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일본은 50억~1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청구권 자금을 가능한 한 현물로 배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에 의한 지원 가능액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MF, IBRD나 ADB 등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의 공공 차관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 차관이란 정부가 외국 정부나 외국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차입하여 국내 금융 기관에 전대해주거나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국내 금융 기관이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차입을 할 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럴 경우 공공 차관 도입

해야 한다거나 어떤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국제 금융 기구와 협의함으로써 북한 지원에 대한 국제 금융 기구의 조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 금융 기구 가입이 선결 과제이며, 북한이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³⁾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미국에서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국제 금융 기구 가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 년의 시한이 필요하며 가입 후부터 북한이 자력에 의해 차관을 공여받기까지는 최소한 약 5~7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아니다. 참고로 북한이 차관을 공여받을 수 있는 총가능 규모는 27억~45억 달러로 추정된 바 있다.⁴⁾

3) 북한과 국제 금융 기구와의 최근 관계를 보면 1997년 2월 북한이 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IBRD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형수·이창재·박영근(1998), 「통일 대비 국제 협력 과제: 국제 금융 기구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68~73 참조.

셋째,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화채권 발행은 해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용

을 인정받는 금융 행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금융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외화채권 만기는 통상 5~10년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적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독일의 대표적 개발 금융 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이 통일후 구동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을 차입하는 데 많이 활용한 바 있다.⁴⁾

넷째,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상업 차관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상업 차관은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금융 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해외 일반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통상 5년 이내로 중기적이다.

다섯째, 다국간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국간 펀드를 구성함으로써 세계은행과 몇몇 국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별신탁기금은 대북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가끼리 자금

또한,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 방안,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상업 차관 도입 방안, 다국간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국간 펀드를 구성함으로써 세계은행과 몇몇 국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그 규모는 관련국간의 이해가 얽혀 있을 것이므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단계별 자금 조달 방안과 규모

이상의 국내외 자금 조달 방안을 남북한 정치·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부 주도에 의한 남북 경협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와 이에 따른 국내외 자금 조달 규모를 추정해보았다. 본 표에서는 남북한간 낙관적인 상황에서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므로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북·미·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주도에 의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과 준비 등이 필요하다. 실제 소요되는 경

4) 박석삼(1999. 9), 「국제 금융 기구의 대북 차관 공여 가능 규모 추정」, 한국은행.

5) 독일재건은행의 해외 자금 조달 사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명식(1998. 5.15), "통독 과정에서 개발 금융 기관의 역할과 시사점", 「산업경제」, 한국산업은행, pp. 20~24.

6) 장형수 외(1998), pp. 102~103.

협 자금은 주로 대상 선정과 사업성 검토 등에 충당될 것이므로 약 50억~10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은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활용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별도 기금을 통하여 남북 경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2001~2004년에는 남북 관계 호전과 북·미·일 수교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정착됨으로써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농업 구조 개혁 지원, 북한의 산업 설비 신·증축 및 개축 등 대북 지원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필요한 실제 소요 자금 규모는 매년 20억~5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른 국내 자금은 먼저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을 통해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해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매년 약 500억~1,000억 원과 별도 기금에 의한 조성액 매년 약 2,000억~3,000억 원, 기타 필요시 증세나 국가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한 조성액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해외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대일 청구권 매년 약 5억~10억 달러, 공공 차관과 외화채권 발행 매년 약 20억~30억 달러, 상업 차관 매년 약 5억~10억 달러

와 필요시 다국간 펀드 매년 약 1억~2억 달러를 상정할 수 있다. 본 단계부터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달 코스트를 낮추면서도 북한 지역에 자본주의 경영체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2005년부터는 남북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북한의 산업 설비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국제 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미 투자된 자금의 회수분을 재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자금 조달을 더욱 확대하여 경협 지원에만 활용될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별도 기금을 각각 매년 약 5,000억 원 상당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매년 1,000억~2,000억 원으로, 기타 증세나 국유 재산 매각을 통해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해외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대일 청구권 매년 약 5억~10억 달러(일정 기간후 청구권 종료), 공공 차관과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 매년 약 30억~50억 달러, 상업 차관 매년 약 10억~20억 달러와 다국간 펀드 매년 약 2억~3억 달러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표) 대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자금 조달 방안

		2000년	2001~2004년	2005년부터	
남북 정치 상황		남북정상회담 북·미·일 관계 개선 조짐	남북 관계 호전 북·미·일 수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	남북경제공동체 가시화	
남북 경협 상황		남북정상회담 전후 대북 지원 계획 사업 수립, 준비	대북 지원 사업 구체화 인프라 구축, 농업 구조 개혁, 산업 설비 신증축 및 개축	인프라 구축 본격화 산업 설비 투자 확대	
실제 소요 자금 규모		50억~100억 원	매년 20억~50억 달러	매년 50억~100억 달러	
자금 조달 전략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자금만 필요할 것이므로 남북협력기 금으로 충당 북한에 대한 책임 일부 부여	북한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의 차입 능력이 배양되기까지 우리 정 부의 주도에 의한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북한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국제 금융 기구의 가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재 투자 활성화 유도	
자금 조달 방안	국내	남북협력기금	50억~100억 원	경협 추이에 따라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 지원	경협 추이에 따라 매년 약 5,000억 원 지원
		대외경제 협력기금	법 개정 (북한을 지원 대상에 포함)	경협 추이에 따라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 지원	경협 추이에 따라 매년 약 5,000억 원 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50억~100억 원	매년 500억~1,000억 원	매년 1,000억~2,000억 원
		별도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매년 약 2,000억~3,000억 원	매년 약 5,000억 원 이상
		기타	불필요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
	해외	대일 청구권	협상 진행	매년 약 5억~10억 달러	매년 약 5억~10억 달러 (일정 기간 후 종료)
		공공 차관	불필요	매년 약 20억~30억 달러	매년 약 30억~50억 달러
		외화채권 발행	불필요		
		상업 차관	불필요	매년 약 5억~10억 달러	매년 약 10억~20억 달러
		다국간 펀드	펀드 설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	매년 약 1억~2억 달러	매년 약 2억~3억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투자 환경 개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주: 1) 낙관적 상황에서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강구될 것이므로 낙관적 상황을 가정함.
2) 정부 주도에 의한 경협 지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경수로 건설 관련 사항은 제외.

맺음말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남북 경협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조달 방안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별도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금 조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대일 배상청구권이고, 다음으로는 공공 차관, 외채발행, 상업 차관과 다국간 펀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금융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채 비율은 지양하되 여신 비율에 대한 특례를 적용, 부채 비율 200% 미만 유지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 기관의 채권 보전책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내외 자금으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나 리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참여 폭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同사업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내 광산채굴권이나 일정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권 또는 위탁단지 조성권 등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당국에도 일정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규모의 북한 산업 개발 지원을 검토할 때 북한의 외채에 대한 처리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 채무에 대한 해결없이 대규모의 차관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자금으로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켜 통일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게 남북한 모두가 상생(win-win)하는 방안인데, 이를 위해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자금 지원 측면이다. 따라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능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 계획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기술 검토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적은 자금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